

동아시아 수출주도 성장의 미래

2009.6.2 | 박형준_새사연 연구원 | hjpark@saesayon.org

목 차

1. 신자유주의와 수출주도 성장
2. 동아시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문제점들
3. 소득 불평등과 불안정성 심화, 사회 양극화 해결이 우선



<http://saesayon.org>

미국의 서브 프라임 위기를 기점으로 삼는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적 차원의 정치경제적 위기도 2년을 넘어섰다. 급작스런 금융시장의 공황이 발생한 2008년 9월을 기준으로 해도 8개월이 지났다. 금융시장의 패닉 상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최소한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주류 경제계의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다.

물론 이런 전망과 달리 비관적인 의견도 많다.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뉴욕 대학의 루비니 교수는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아시아의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은 산산조각 났다”고 말하며 “이 지역 국가들은 국내 수요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데일리> 2009. 5. 25).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금요일(5월 29일)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개최한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이념과 전략”이라는 정치경제학 포럼에 참가한 미국의 루이스앤클락 대학 교수인 하트 랜스버그(Hart-Lansberg) 교수도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팽창에 의존하고 있던 동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이 이번 위기로 인해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과거 방식으로는 경제회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역 규모가 GDP와 비슷한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면서 선택해야 할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찾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제3세계에 강제된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신자유주의와 수출주도 성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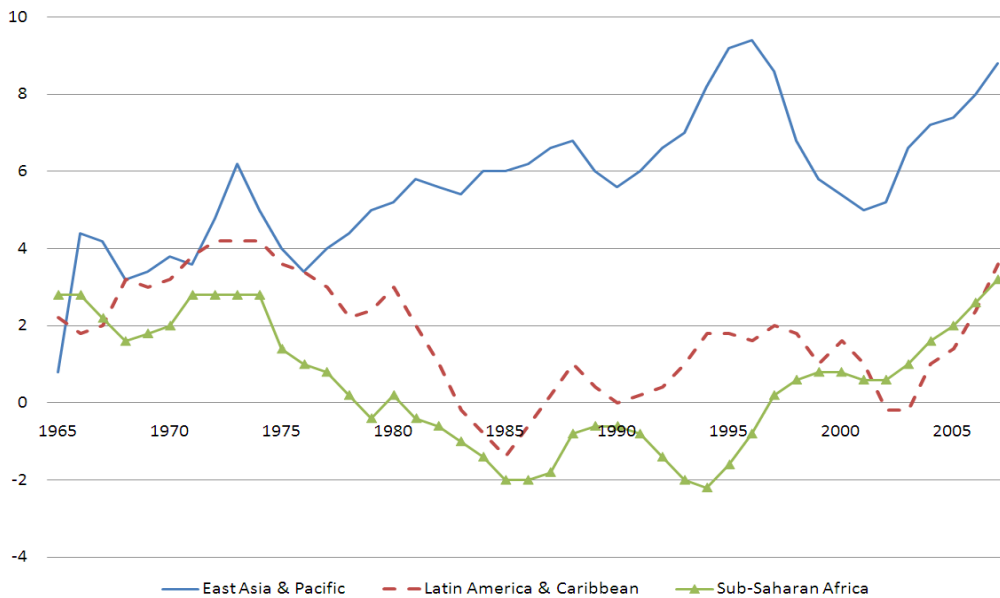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을 위시로 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주의 원칙을 강화하며 자유화, 탈규제, 사유화를 기조로 하는 세계화를 추진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고수하고 있던 수입대체산업 전략을 포기하고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받아들여

도록 중용했다.

제3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겪고 있던 부채위기는 선진국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1980년을 전후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금리 정책을 펼쳐,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기준금리가 20퍼센트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제3세계 국가들은 채무불이행을 선언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한 선진 국가들은 IMF와 세계은행을 통해 제3세계 국가들이 부채경감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교환하도록 만들었다.

IMF와 세계은행은 제3세계 국가들이 수출을 증대하여 무역흑자를 내고 이를 통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하고 수출산업에 필요한 생산재를 수입해야 했다. 또한 국내소비는 최대한 억누르는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다수의 수출주도성장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림 1. 1인당 GDP 성장률(단위: 퍼센트, 5년간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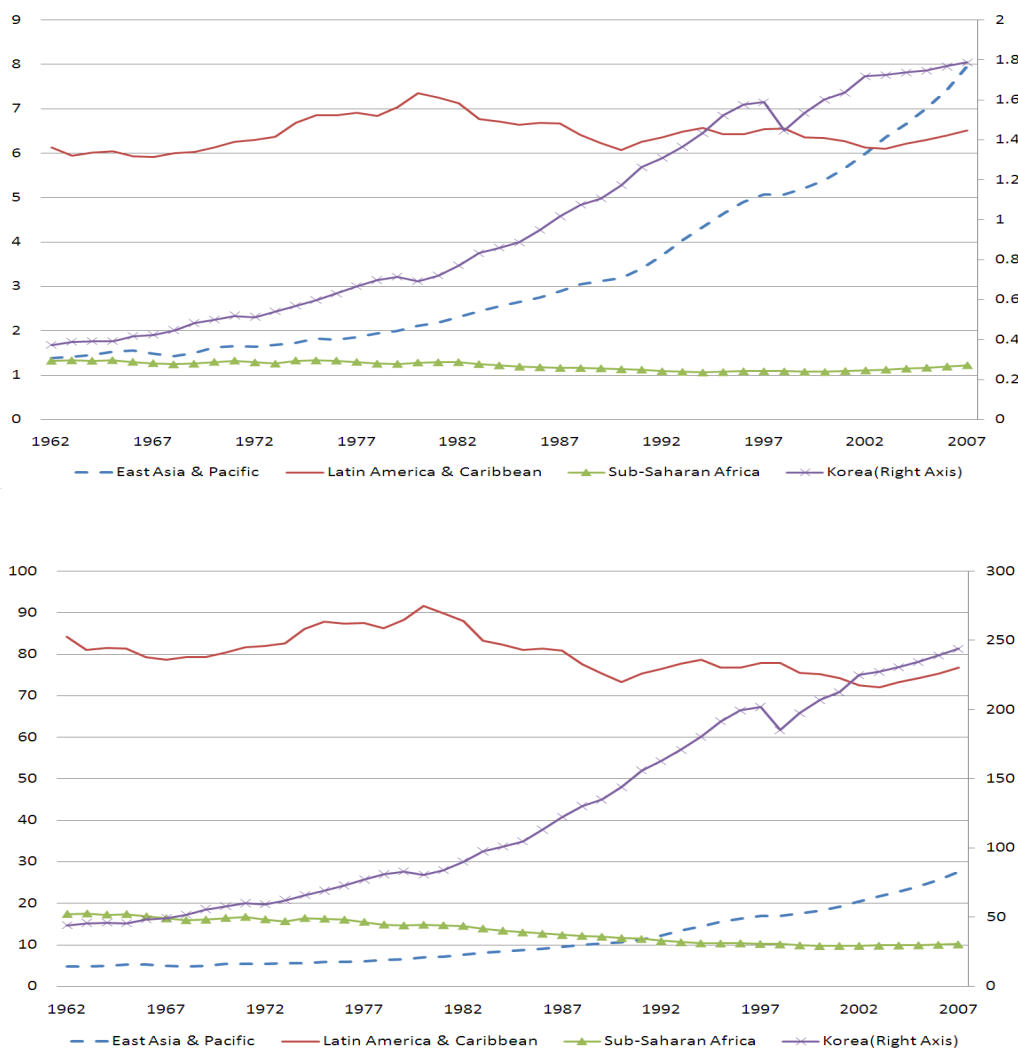
*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East Asia & Pacific에는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의 추세선은 주로 중국에 의해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1은 남미와 남아프리카(사하라 사막 이남), 그리고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1인당 GDP성장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거의 20년 동안 남미와

남아프리카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종속이론의 주장대로 남아프리카는 저성장을 경험했다. 최근에서야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저성장 국면을 간신히 벗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GDP의 성장세는 꾸준하다. 좀 다른 각도에서 GDP에 관한 지표들을 분석해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 지역별 GDP 비중과 1인당 GDP 비교: 지역/세계
(단위: 퍼센트)



* 출처: W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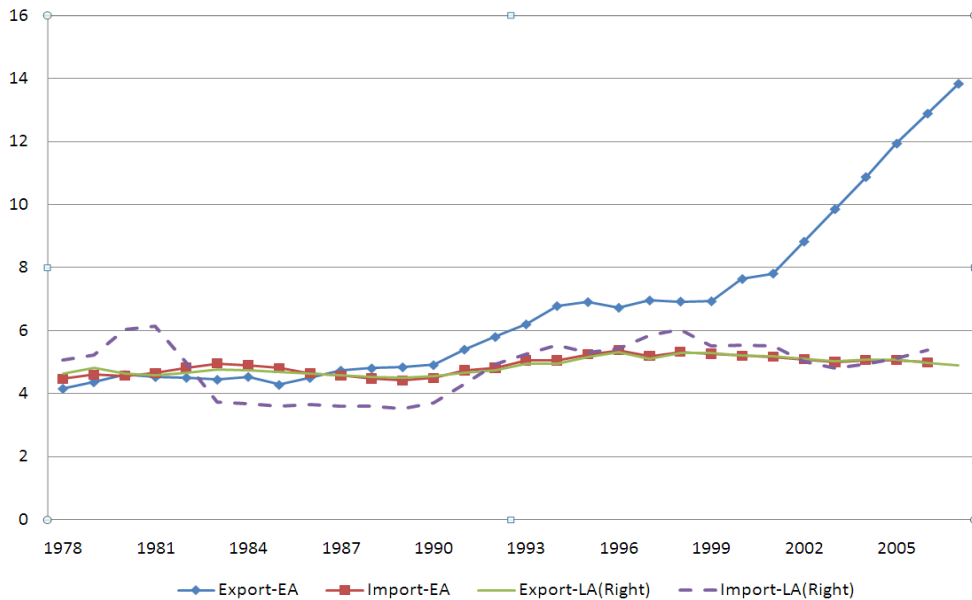
그림2의 첫 번째 그래프는 세계 전체의 GDP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남미와 남아프리카의 몫은 정체가 계속되었거나 줄어든 반면, 동아시아와 한국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서 2007년까지 한국의 몫은 6배, 동아시아의 몫은 8배가량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의 두 번째 그래프는 지역의 1인당 GDP를 세계평균에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도 비슷한 추세를 얻는다. 남미와 남아프리카의 1인당 GDP는 세계평균에 비교해서 추세적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동아시아와 한국의 1인당 GDP는 급격히 증가해왔다. 특히 한국의 1인당 GDP는 1980년에는 세계평균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2.5배 정도로 많다.

그림 3. 세계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 지역/세계

(단위: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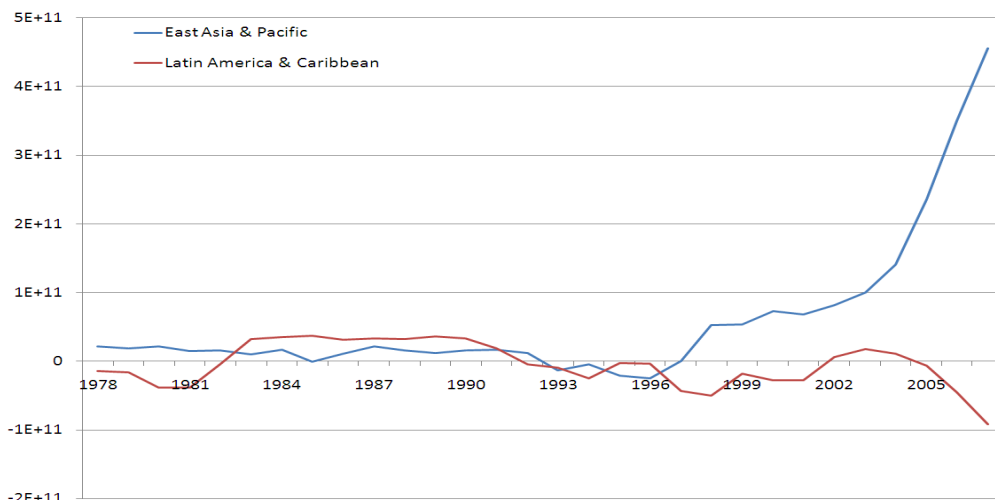
* 출처: WDI

** EA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LA는 남미와 카리브 해안을 의미

그림3은 세계무역에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이다. 동아시아의 수출은 1978년에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4퍼센트 정도를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14퍼센트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반면, 남미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퍼센트 전후로 지난 30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9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한 반면, 남미는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였다(그림4).

그림4. 무역수지(재화와 용역)

(단위: 미국 달러)



* 출처: WDI

지금까지 살펴본 GDP와 무역에 관한 통계분석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제3세계에 강제된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동아시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전략을 강제했던 IMF와 세계은행이 주장한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얻은 무역수지 흑자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국내외적인 구조적 불균형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 것 뿐이다.

동아시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문제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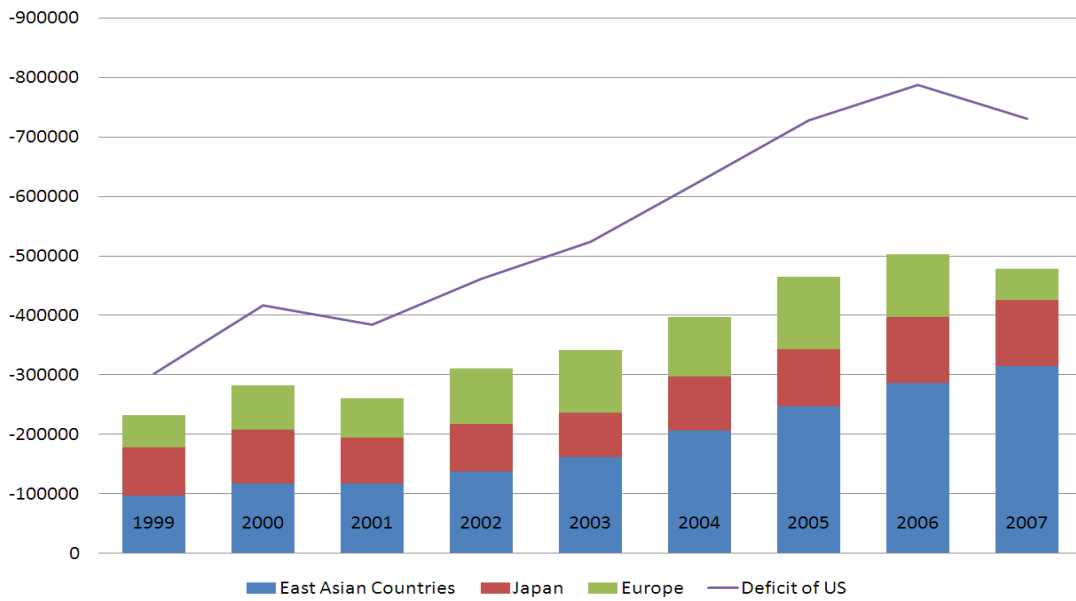
동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발전되어온 전 지구적 차원의 국제적 생산네트워크의 구조적 취약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앞서 소개했던 하트 랜스버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성장한 동아시아의 경제적 활동은 수출 지향적 초국적 기업들이 통제하는 국제적 생산네트워크의 확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동아시아의 수출/GDP 비율을 보면, 1980년에 24퍼센트 수준에서 2005년에는 55퍼센트로 증가하였다. 세계 평균은 28.5퍼센트 정도이다. 이런 추세적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의 58퍼센트, 하이테크 부문의 88퍼센트가 초국적 기업의 몫이라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제조업 수

출의 73퍼센트, 싱가포르는 86퍼센트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무역의 절반 정도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 있는 초국적 기업이 최종 조립 공장 역할을 하고, 조립을 위한 부품들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성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산업이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초국적 기업에 구조적으로 종속되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는 또한 낮은 부가가치 비율로 직결된다.

그림5.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대상국가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미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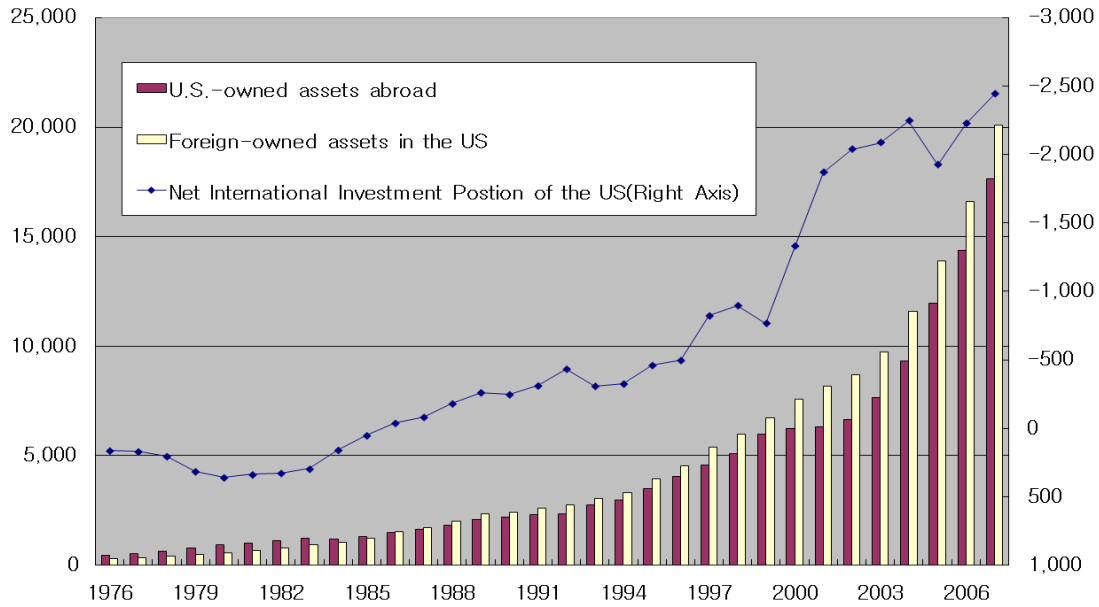
더 큰 문제는 동아시아의 수출주도 성장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5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와 그 거래 대상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강제하여 서로 경쟁하게 만들면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였고, 선진국 내에서는 금융화를 추진하여 자산시장의 호황을 누렸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산업과 금융 체계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달러가 유출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자국 내 자산시장의 크기를 계속 키워 해외 투자자들을 유인해 유출된 달러를 재흡수해야 했다. 그림6은 미국의 국제투자수지로서 달러의

국제적 순환 메커니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6. 미국의 국제투자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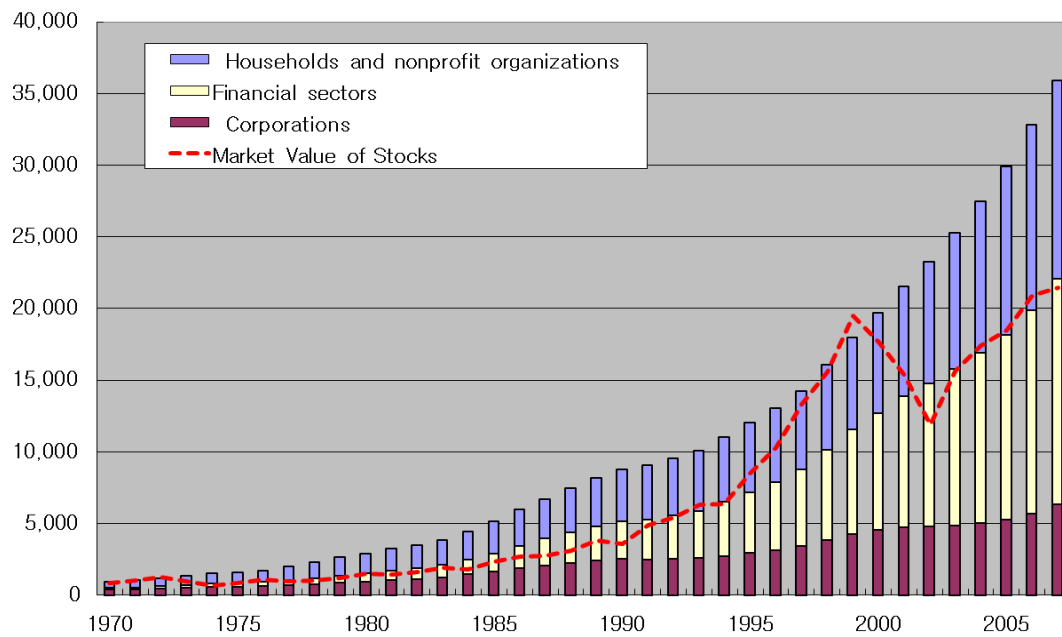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 출처: 미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그림7. 미국 신용시장의 부문 별 부채 잔액

(단위: 십억 달러)



* 출처: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보다 직접적으로 동아시아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을 통한 소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7은 미국의 신용시장에서 각각의 경제주체들이 지고 있는 부채의 잔액을 나타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 자체가 신용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호황이었고, 실물분야의 성장도 가계의 신용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동아시아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미국 가계의 소비패턴의 변화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미국 가계의 소비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림8. 한국과 중국의 최근 수출증감률(미국은 수입)



* 출처: 한국은행

그림8은 2008년 9월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대거 파산하면서 심화된 경제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입도 같이 줄어들어 전체 경상수지에서는 흑자를 기록해 외환시장의 안정에는 도움이 되고 있으나 산업의 갑작스런 위축을 의미하는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그리 반길 일은 못 된다. 미국이 위기 이전에 기록했던 7,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한다면 이는 곧 동아시아 수출산업의 불황으로 직결되고 실업문제의 심화와 기업도산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소득 불평등과 불안정성 심화, 사회 양극화 해결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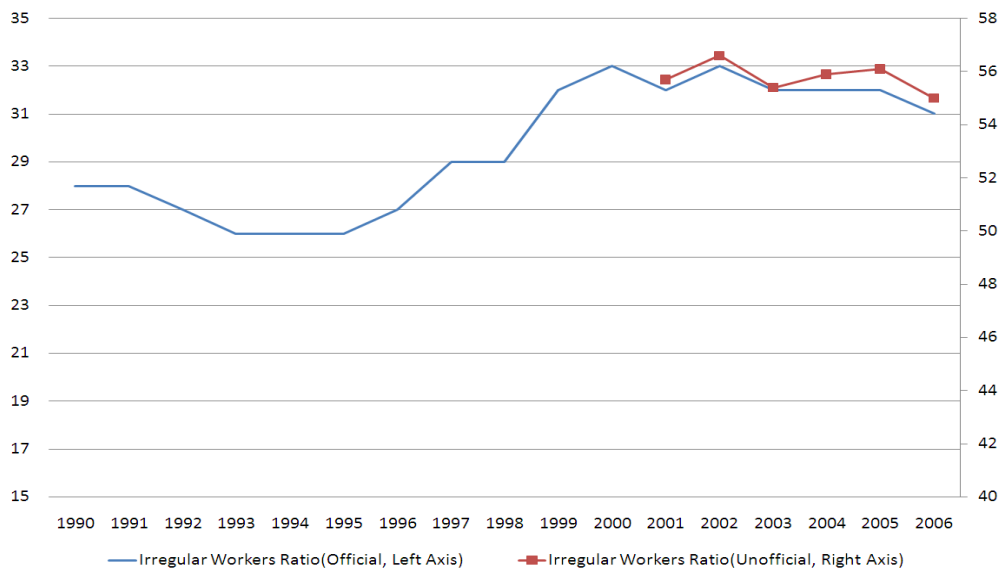
그러면 내수를 확대해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산업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는 지역 가계부문의 소비여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진행된 수출산업주도 성장전략은 지역 내 소득의 불평등과 직업의 불안정성 심화와 함께 진행되어 왔다.

그림9. 한국의 소득불평등 지수



* 출처: 통계청

그림10. 비정규직 비율 (단위: 퍼센트)



* 출처: 통계청, 노동사회연구소(비공식비율)

그림9는 대표적인 사회적 불평등 지수로 이용되는 지니계수와 상위20퍼센트의 소득을 하위20퍼센트의 소득으로 나눈 값을 5분위한 소득 비교이다. 두 지표 모두 19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림10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1997년 위기를 전후해 급격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30퍼센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노동사회연구소 등 진보 진영의 연구단체에서는 50퍼센트가 훨씬 넘는 임금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런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수 확대를 통해 수출산업 쪽의 과잉생산을 흡수하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30년간 승승장구해온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한 것으로, 한국과 동아시아의 경제가 97년 경제위기처럼 빠르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산업과 경제체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